

비상경제장관회의  
22-1

# 재정준칙 도입방안

2022. 9. 13.

관 계 부 처 합 동

## 순 서

I. 추진배경 .....	1
II. 재정준칙 도입방안 .....	2
1. 준칙유형 .....	2
2. 관리지표 .....	2
3. 관리기준 .....	3
4. 보완장치 .....	4
5. 채무 우선상환기준 .....	4
6. 도입근거 및 시행시기 .....	4
III. 향후 추진일정 .....	4

# I. 추진배경

## ①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

-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재정적자가 매년 100조원 수준
- 국가채무도 빠르게 증가하여 '22년 1,000조 초과 전망

관리재정수지 추이



국가채무 추이



## ② 재정준칙은 국제적으로 보편적, 우리나라는 도입 지연 중

- 현재 OECD 회원국(38개국) 중 한국·튀르키예만 준칙 도입경험 無
- 과거에도 다수 여·야 의원들이 재정준칙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으나, 최종적으로 법제화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

\* 송영길(재정건전화법안, '16.12월), 백재현(국가재정법개정안, '17.10월)  
송언석(재정건전화법안, '19.5월 '20.6월), 류성걸(재정건전화법안, '20.6월) 등

## ③ 지난 정부안은 실효성에 대한 우려로 보완필요성 제기

- 지난 정부에서도 준칙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으나, 준칙의 실효성·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국회 계류\*

\*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제출('20.12) → 기재위 상정('21.2) → 소위 논의('21.11) → 계류

- 한도식\*이 복잡하며, 통합수지 △3%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

\* "국가채무비율/60%" X "통합수지비율/△3%" ≤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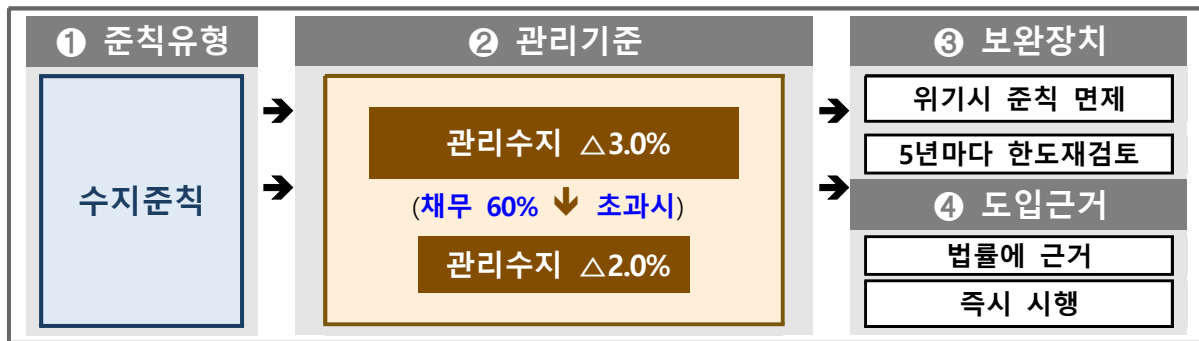
- 한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여 구속력이 낮고, 유예기간을 3년 정도 두어 도입의지가 약하다는 지적

## II. 재정준칙 도입방안

◇ 학계 견해와 국회에 상정된 **준칙 관련 다수 법안**, **해외 운용사례·중장기 재정여건**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정준칙 재설계

- ①재정통제 강화, ②기준 단순화, ③법률 근거, ④즉시 시행 방향으로 재검토

### 【내용요약】



### ① [준칙유형] 수지준칙 도입하되, 보완적으로 채무지표 활용

-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**수지준칙**을 **채무** 지표로 보완

\* 준칙유형: 수지(93개국) > 채무(85개국) > 지출(55개국) > 수입(17개국)

- 다만, **고령화** 등으로 **채무비율**이 지속 상승하는 구조를 감안하여, **채무한도**보다는 **채무증가속도**를 관리하는 방식\*으로 설계

\* 기본적으로 수지한도를 관리하되, 국가채무가 특정비율 초과시 수지 한도를 축소

### ② [관리지표] 수지는 관리수지, 채무는 국가채무(D1) 활용

- (**수지**)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 속, 보다 엄격한 재정 건전성관리를 위해 **통합수지**에서 **관리수지**로 활용지표 변경

\* 통합/관리수지(GDP%) : ('20<sup>결산</sup>) $\Delta 3.7/\Delta 5.8$  ('21<sup>결산</sup>) $\Delta 1.5/\Delta 4.4$  ('22<sup>2차추경</sup>) $\Delta 3.3/\Delta 5.1$

- 복지제도 미성숙 등으로 **사보수지** 흑자가 발생하는 우리나라 특수성 감안시, **관리수지** 통제가 **채무관리**에 더 효과적

\* 관리수지 = 통합수지 - 사회보장성기금수지(국민·사학·산재·고보)

- (**채무**) 정부가 건전성 지표로 일관되게 관리해온 **국가채무(D1)** 활용

### ③ [관리기준] 관리수지 $\Delta 3\%$ , 채무 60% 초과시 $\Delta 2\%$ 로 축소

○ (수지) 현 수지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담보하면서도 채무증가 속도를 안정적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수지  $\Delta 3\%$ 로 한도 설정

- '22년 GDP대비  $\Delta 5\%$  수준인 관리수지 적자를 코로나 이전 수준\*인  $\Delta 3\%$  이내로 대폭 개선시키는 수준

\* 관리재정수지(GDP대비%) : ('19) $\Delta 2.8$  ('20) $\Delta 5.8$  ('21) $\Delta 4.4$  ('22) $\Delta 5.1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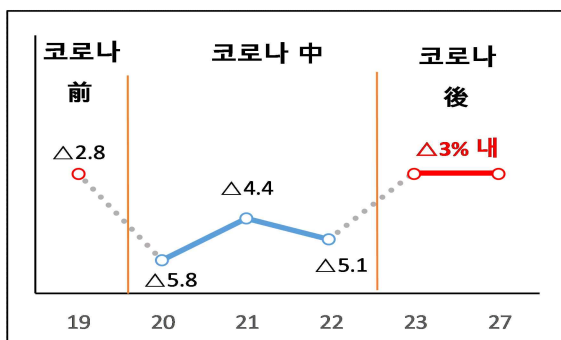
- 국정과제 소요를 담으면서도, 강력한 지출효율화와 세입확충 등 각고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달성가능한 적자 규모

○ (채무) 해외 준척사례 및 중기 채무전망 등을 감안하여 국가채무 60%를 기준으로 설정하고, 초과시 수지한도  $\Delta 2\%$ 로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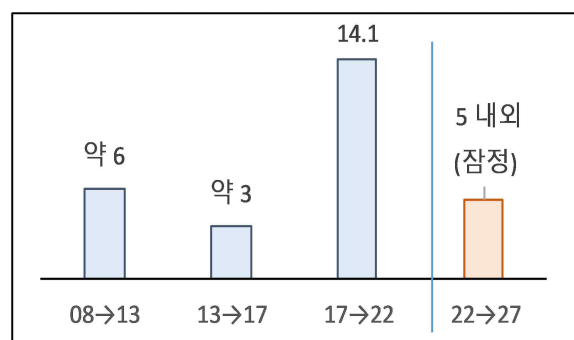
\* EU 회원국 등 가장 많은 국가들이 채무기준으로 60% 채택

- 현 정부 임기 중 채무비율은 50% 중반 수준으로, 전 정부에 비해서 채무증가속도를 대폭 감소 가능
- 국가채무비율이 60% 초과시 수지한도가 낮아지면서 채무증가 속도가 둔화  $\Rightarrow$  채무비율을 일정 범위내로 안정화 가능

< 관리수지비율(GDP%) >



< 국가채무비율 증가폭(%p) >



$\Rightarrow$  재정준칙 준수를 담보할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

○ 추가 재정관련 지표\* 등을 발굴하여 재정준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·분석 및 필요시 대응방안 강구

\* 예시 : 의무지출/총지출, 국고채이자/일반회계지출, 적자성채무 비율 등

#### 4 [보완장치] 재정의 역할 담보를 위해 예외사유 등 보완장치 마련

- (예외사유) 예외적 상황시 준칙적용을 면제하여 재정의 역할 담보
  - 전쟁·대규모 재해, 경기침체 등 예외 상황시 준칙 면제
    - \* ❶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❷경기침체·대량실업·남북관계 변화·경제협력과 같은 대내·외 여건 중대 변화(국가재정법 제89조)
  - 예외사유 소멸 후 편성하는 본예산안부터 준칙 즉시 적용,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대책 수립도 의무화
    - \* 재정건전화대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여 국회 제출
- (한도재검토)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 위해 5년마다 한도재검토

#### 5 [채무 우선상환기준]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가채무 상환비율 확대

-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가채무 축소노력을 강화(현 30%→50%)

세계잉여금 처리절차 (국가재정법 §90)

	세계잉여금 발생(A)	•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- 다음연도 이월액
①	지방교부세(금) 정산(B)	• 지방교부세(내국세 19.24%) 및 교부금(20.79%) 정산
②	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(C)	• (A - B) × 30% 이상
③	채무상환(D)	• (A - B - C) × 30% 이상 → 50% 이상
④	추경활용 또는 세입이입(E)	• A - B - C - D

#### 6 [도입근거 및 시행시기] 국가재정법에 근거, 법 통과 후 바로 적용

- (도입근거)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확보하고, 준칙 관리기준에 대한 국회심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(국가재정법)에 관리기준 마련
  - ※ 준칙 도입국의 60% 이상이 헌법 또는 법률에 준칙 근거(IMF)
- (시행시기) 법 통과 이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('24년)부터 적용

### III. 향후 추진일정

- ☐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(9월)
- ☐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금년 내 법제화 추진 (12월)

## 참고

## 재정준칙 도입방안 비교

	기존안('20.10월 발표)	개정안
관리지표	통합수지+국가채무	관리수지(국가채무)
한도식	$\left(\frac{\text{국가채무}}{60\%}\right) \times \left(\frac{\text{통합수지}}{\Delta 3\%}\right) \leq 1.0$	관리수지 $\Delta 3\%$ 이하 (채무 60% 초과시 $\Delta 2\%$ )
법적근거	시행령	법률
시행시기	법 개정후 약 3년 유예 ( '25년 적용)	법 개정후 바로 적용
예외사유	추경편성요건과 다름 <div> 1. 전시·사변, 국가비상사태  2.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 큰 대규모 재난  3. 세계금융위기, 코로나19 위기 등에 준하는 위기로 성장·고용상 중대한 변화 발생 </div>	추경편성요건과 같음 <div> 1. 전쟁·대규모 재난  2. 경기침체, 대량실업, 남북관계의 변화,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·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 </div>
예외사유 소멸 후 한도적용	예외기간 중 증가된 채무를 한도식에 4년에 걸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재적용	즉시 재적용
완화규정	〈 경기 둔화시 〉 $\left(\frac{\text{국가채무}}{60\%}\right) \times \left(\frac{\text{통합수지}}{\Delta 4\%}\right) \leq 1.0$	삭제 (통상적 경기변동은 한도 내 대응)
한도재검토	5년마다 한도재검토	좌동
세계잉여금	국가채무 상환비율 상향(30→50%)	좌동